

# ‘전기차 충전’ 더 간편해진다 올 충전기 6.2만대 확대·보급

아파트 주민대표 직접 신청 가능  
‘불편민원 신고센터’ 새로 운영  
‘앱카드지갑’으로 편의성 높여

28일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완속 충전기 6만대, 급속충전기 2000대를 확대, 보급한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자대표도 전기차 공용 충전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누적 신청건수는 1만대를 넘어섰다.

완속충전기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수요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급속은 지역 특성, 전기차 보급 등과 연계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관련 직접 신청한 건 수가 지난 23일 기준 누적 1만 361대로 집계됐다.

그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 사업자를 선정해 직접 신청이 가능해졌다.

직접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360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81대, 인천 846대, 대구 696대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이 약 절반을 차지했다.

충전 용량별로 보면 7kW급 9408대, 과금형 콘센트 423대, 11kW급 382대, 30kW급 103대 순으로 7kW급이 90% 이상이었다. 30kW급 중속 충전기의 경우 마트, 영화관, 체육시설 등에서 2~3시간 가량 머무르면서 충전을 희망하는 곳이 많아 올해부터 새로 지원을 시작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 중이다.

올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내 ‘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새로 운영해 충전 사업자가 신속하게 충전기를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충전 시 필요한 회원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앱카드지갑’도 개발 중이다. 충전 사업 자별로 각각 발급하는 회원카드는 1장만 있어도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도 확대된다.

사용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충전기의 ‘고장, 이용 중, 이용 가능, 예약상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 적재적소에 충전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충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인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 글로벌 허브공항 성장

오늘 개항 22주년 기념식

인천공항이 올해로 개항 22주년을 맞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오후 3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 홀에서 ‘인천공항 개항 22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현재까지 간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인천공항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 50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1992년 11월 착공식 이후 8년 4개월의 건설 기간을 거쳐 2001년 3월 29일 개항하며, 오늘날 성공적인 국제사업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 기준 인천공항의 취항 항공

사는 88개, 취항도시는 52개 국 173개 도시에 달한다. 국제화율은 세계 5위(2019), 국제화물은 세계 2위(2021)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개항 22년만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성장했다.

또한 국제공항협회(ACI) 주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ACI가 새롭게 도입한 ‘고객경험인증제’에서 세계 공항 중 최초로 5단계 인증을 획득하며 ‘5성급 공항’으로 등극했다.

공사는 이와 같은 우수한 공항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15개 국 32개 해외사업을 수주(7억 5200만불 규모)했으며, 전 세계 150개국 1만여 명의 항공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항공교육과정을 제공 중이다.

/허정문 기자 zelkova@

## 농산물 유통, DX로 年 2.6조 비용 줄인다

(디지털 전환)

aT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계획  
온라인 거래 규모 2배 성장

농산물 유통·물류 혁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하고, 산지 비대면 판매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의 유통비용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 및 2023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온라인 거래 규모는 빠르게 성장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쇼핑 농산물 거래액은 7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5조8000억원 대비 22%, 팬데믹 직전인 2019년 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두배(92%) 성장한 수준이다.

이같은 유통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

춰 지난해 aT는 농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스마트 APC 표준 모델, 도매유통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유통주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산지조직과 도매법인 등 온라인경매를 적극 지원해 2022년 거래액은 전년 대비 약 95% 성장한 650억원을 달성했다. 식재료 조달 분야에서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사용처를 학교·군부대·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한 결과 거래 규모 3조4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aT는 한발 더 나아가 농식품부가 올해 1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등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스마트 APC 정보지원시스템’(가칭)을 구축해 APC 내부 업무와 농산물 거래 디지털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지 온라인경매도 활성화해 유

통구조 효율화와 농가소득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연내 개선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해 통합플랫폼 구축, 이용주체 유지, 운영 규정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 예정인 전자송품장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주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스마트 스튜디오를 운영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채널 확보를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유통교육원에서는 농식품 유통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준진 aT 사장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은 복잡한 단단계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산지조직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확대에 효과가 있다”며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에 집중해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휠라 요가매트서 독성 유해물질 검출

국내 시판중인 휠라 요가매트에서 단쇄염화파라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독성이 강해 세계적으로 저감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에선 명확한 정이나 관리 기준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8일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 시험·평가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대상으로 선정된 요가매트는 가네샤 요가 프랩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엘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 휠라(브랜드명 가나다 순) 제품이다.

시험 평가 결과 이 가운데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모델명: FILA PIPING WIDE NBR 15mm Yoga Mat)’ 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이 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만3050.5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 등 POPs는 독성이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박일준 “빠를 꺾는 자구노력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

한전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 참석  
올해 효율개선 사업 1088억원 투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경영혁신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빠른 꺾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28일 서울 중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남부발전, 에너지공단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높을 전망”이라며 “지난해 한전 영업이익자가 30조원을 넘어서고,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원에 육박하는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공기관이 에너지 공급에 흔들림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비용 지원이 문제 해결의 답이 될 수 없다”면서 “고효율 기기·설비 보급, 적극적인 효율·절약 관리, 국민 모두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만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공공기관이 사회 공헌활동, 상생협력활동 등을 통해 효

율 개선과 전국민 1키로와트시(kWh) 줄이기와 같은 에너지 절약 실천과 생활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소상공인이나 농업가, 뿌리기업 등 에너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취약한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알려진 일부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의 외유성 출장과 관련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기강 준수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중점 추진 경영혁신 과제와 범국민적 효율·절약 운동 선도 사업들을 점검했다.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5조3000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초과달성한데 이어 올해 6조 5038억원(한전과 발전사 3조3000억원, 가스공사 2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 5038억원)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아울러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과 절약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 사회공헌활동 및 대중소상생 협력자금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개선에 총 10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등 에너지 효율기기·설비지원’(868억원), ‘단열공사, 창호교체 등 건축물 효율개선 지원’(143억원), ‘캐시백 등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및 홍보’(77억원)를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